

# 미제가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량 봉 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89페이지)

제국주의의 아성인 미제가 《인권옹호》에 대하여 떠벌이는것은 문제설정조차 되지 않는 기만극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권옹호가 아니라 인권유린이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간판이다.

미제가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은 첫째로, 그것이 저들의 인권유린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이라는데 있다.

미제가 《인권옹호》를 떠벌이는것은 극악한 인권유린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인권옹호》자로 둔갑함으로써 인민들의 반정부투쟁감정을 무마시키고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하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사회적불평등과 빈부의 차이가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이다.

미제의 인권유린행위는 미국지배층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감행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악법들과 미련방수사국을 비롯한 폭압기구들이 자국내 인민들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

1971년 5월 3일부터 5일사이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정부의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항의시위를 벌리였다. 미국지배층은 침략의 예봉을 아시아에 돌리면서 쓰련과 군비경쟁을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근로대중은 점점 더 어려운 생활난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이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워싱턴시민들은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던것이다. 그런데 미국반동지배층은 경찰을 내몰아 시위를 탄압하였으며 1만 3000여명을 한꺼번에 체포구금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떠벌이는 《인권옹호》가 기만이고 위선이며 인권옹호가 아니라 인권유린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미국에서는 특권층만이 《인권》을 보장받고 대다수 인민들은 인권유린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가혹한 인종차별정책으로 하여 수많은 흑인들이 공직과 거주, 교육, 보수 등 여러면에서 차별과 제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있다.

2013년 7월 18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5%가 자기들이 노동생활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있다고 불만을 터놓았다.

2014년 8월에는 미국중서부 미주리주의 퍼구슨시에서 18살난 흑인청년이 백인경찰관의 총에 맞아 죽었으나 현지사법당국은 이 백인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에서 소수민족출신주민들은 범죄의 피해자로,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2013년 7월 14일 플로리다주법원이 집으로 가던 무방비상태의 흑인소년을 총으로 쏘아살해한 백인경찰에게 무죄를 선언한것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범람하는 총기류범죄때문에 인권담보는커녕 생명조차 보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최근년간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는 미국에서 해마다 총기류에 의한 폭력으로 3만여명이 사망하고 20여만명이 부상당하고있다고 밝혔다.

총기류소유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공연히 허용되고있는 미국에서 총기류와 총탄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있다. 이

것을 막아보려고 미행정부는 지난해 그 무슨 대책안을 내놓았으나 총기류범죄는 미국자본주의제도자체가 낳은 산물로서 그것은 미국자본주의제도자체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없앨수 없는 악습이다.

미국사회에 성행하고있는 총기류범죄의 밑바탕에는 약육강식의 법칙과 극도의 인간증오사상, 황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깔려있다. 범죄의 총성은 곧 미국인들속에서 폐사롭게 울려나오는 《너는 죽어야 내가 산다.》는 생존론리의 산물이다.

철없는 어린이들까지 총기를 휘두르고있는 미국사회에서는 인권옹호나 사회의 안정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으며 총기류범죄는 미국존재자체를 파멸에로 몰아넣고있다.

미제의 인권유린행위는 저들의 식민지 또는 점령지에서 더욱 혹심하게 감행되고 있다.

2002년 6월 13일 남조선강점 미군이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의 한 도로에서 길가던 조양중학교의 14살난 신효순, 심미선 녀학생들을 장갑차로 깔아 살해한것은 세계를 경악케 한 인권유린행위의 극치이다.

인민들에 대한 테로와 인간살육을 일삼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를 떠벌이는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며 용납될수 없는 철면피한 행위이다.

미제가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은 둘째로, 그것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수단이라는데 있다.

미국은 랭전의 종식을 저들의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았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도를 실현》하며 모든 나라들이 저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강권질서를 세우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독점적지배체제가 수립된 1극화세계를 실현하는것을 침략적인 대외정책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고있는 미국에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구실이 필요하였다. 그 구실로 들고나온것이 바로 《인권옹호》이다.

미국에서 《인권외교》를 대외정책의 중요한 문제로 들고나온자는 1977년에 미국 대통령이 된 카터이다. 그는 1976년에 자기의 선거공약에서 《인권옹호》를 첫번째 조항으로 내걸고 인권이 유린되고있는 나라들에 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카터는 《인권존중이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며 《인권옹호》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추를 이루는 문제라고 하면서 저들이 마치도 세계인민들의 인권옹호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가장해나섰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이나 사회주의를 지향해나가는 나라들에서 《인권이 유린》되고있는것처럼 기만선전을 벌리었다.

하지만 미제는 1980년에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아래 사단무력을 광주인민봉기진압에 동원하여 대학살만행을 감행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인권교살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오늘 미제는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오만하게 놀아대고있다.

국제법은 어떤 나라, 어떤 세력이 자기의 리기적목적실현을 위해 국가주권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유엔총회회의들에서 채택된 선언들에는 모든 국가들이 어떤 구실을 걸고 다른 나라 문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주권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요소들을 반대하거나 국가주권침해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행한 전화도청 및 전자우편절취행위는 특대형인권유린행위이다.

미중앙정보국의 이전 정보요원이였던 스

노우덴이 공개한 자료와 여러 나라 신문, 통신들이 전한데 의하면 미국은 세계의 80여 곳에 도청시설들을 꾸려놓고 불법무도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2013년 10월 영국신문 《가디언》은 미국 가안정보장국이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의 공모밑에 35명의 외국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 2013년 12월 5일부가 전한데 의하면 미국은 손전화 위치추적방식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하루 50억건씩 수집하여왔다.

미국의 인권옹호단체인 시민자유연맹의 관계자는 미국가안정보장국의 무차별적인 도청행위에 대해 우려하면서 현 실태는 《통화수단을 단절하고 동굴에서 사는수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은 해마다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고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마수를 뻗치고 모략을 꾸며 지도부를 전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미국의 《인권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나라에서나 정권의 적수들이 로골적으로 현 지도부나 전반적사회체제를 반대하여 합법적인 선전과 선동을 할수 있어야 인권이 준수된다는것이다.

자주권을 생명으로 하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인권기준》을 허용할수는 없는것이다.

미국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인권공세를 벌리면서 동시에 제재조치를 취하고있다. 말하자면 국제기구들을 발동하여 해당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는 그 무슨 결의들을 조작하는가 하면 동맹국, 추종세력들이 여기에 합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있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미국의 경제제재는 종당에 군사적침략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인권비난으로부터 시작하여 끈질긴 공

세를 들이대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유엔 무대에 끌고가 무력간섭으로 넘어가는것이 미국이 상투적으로 쓰고있는 수법의 하나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미국주도의 나토군의 공격이다. 1999년 3월 24일 미국주도의 나토군은 《인권과 소수민족보호》의 간판밑에 당당한 주권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횡포한 군사적공격을 개시하였다. 미국과 나토는 유고슬라비아에 근 80일간 850대의 전투기를 포함한 1 200대의 비행기를 연 2만 5 000회이상 출격시켜 수많은 대상들에 무차별공습을 들이대고 2 000여기의 순항미싸일을 발사하였으며 1만 수천t의 폭탄을 퍼부었다. 미국은 여기에 렬화우라니움탄까지 사용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반테로》의 간판을 내걸고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벌린 침략과 간섭은 인권유린행위를 동반한 최악의 국가테로범죄이다.

미국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개시하였다. 4월 7일 미군용기들은 싸담 후세인이 있다는 바그다드교외의 만수르구역의 한 건물에 약 1t 짜리 지하엄폐호파괴용폭탄 4개를 투하하여 그 일대를 폐허로 만들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에 30만명의 병력(그중 미군 25만명)과 근 90대의 각종 위성, 960대의 비행기, 6척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115척의 함선, 2 000여대의 탱크, 수십대의 장갑차 등 방대한 무력과 정밀유도무기들을 동원하였다.

미국은 1991년 만전쟁때의 3배나 되는 공군무력을 동원하여 보통 하루에 1 000여회의 출격을 보장하였고 국제협약에 따라 금지된 송이폭탄과 렬화우라니움탄까지 사용하였으며 300여종의 최신형무기들을 무차별적으로 시험하였다.

전쟁에 사용된 폭탄은 2만 4 000여발에

달하였다. 이 전쟁에서 3 240여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국제법과 유엔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행된 엄중한 주권 침해행위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를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나라에 간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에서 인권문제전문가라고 하는자는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조선의 핵개발을 저지시킬수 없다면 인권문제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을것》이라고 떠벌이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 무슨 인권대표라는자는 유엔안전보장리사

회가 《북조선핵문제뿐아니라 인권상황을 연구의제로 채택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이것은 미제가 인권공세를 《세계화》실현의 마지막주패장으로 써먹어보려 하고있다는것을 세계앞에 드러내놓은것으로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의 인권공세가 끊질기게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미제의 인권공세에 각성을 높이고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내정간섭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